



포커스

1. EU집행위, 러시아 MFN 박탈, 철강수입 금지포함 對러4차 제재발표

□ 집행위, 러시아 MFN박탈 등 4차 제재 조치 발표(3.11)

- WTO 최혜국대우(MFN)지위 박탈,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회원자격 정지, 철강수입금지, 에너지부분 신규 투자금지, 사치품 수출금지 등이 포함

< EU집행위 발표, 對러시아 4차 제재조치 (3.11)>

- ① WTO 최혜국 대우 박탈 및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회원자격 정지
- ② 푸틴 측근 및 가족들에 대한 압력 지속, 다음주 G7 재무, 법무, 내무장관 회의에서 대상자 조율예정
- ③ 러시아 및 주요인사의 제재를 우회한 암호화 자산 사용 동결
- ④ 유럽산 명품의 러시아 수출금지, 러시아 고위층에 압력
- ⑤ 철강부분 주요 품목 수입금지, 수십억 달러규모의 수출수입을 박탈
- ⑥ 러시아 에너지 부분에 대한 유럽의 신규투자금지, 에너지 탐사와 생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투자, 기술이전, 금융서비스 등 포괄금지

□ 최혜국대우(MFN)박탈, 철강수입금지에 따라 교역규모 감소 예상

- EU는 MFN원칙에 따라 평균 5.1%의 관세를 부과 중('19년)으로 MFN철회로 對러시아 고율 관세 부과나 쿼터 설정 가능
- 러시아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41%(1위)로 對EU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나,
- EU의 對러시아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세부조치 내용에 따라 실질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EU의 對러시아 수입규모는 '21년 기준 168억 달러로 광물성 연료·에너지가 69.4%(116.6억 달러), 철강·아연 5.22%(87.7억 달러), 진주 귀금속 등 3.2%(54억 달러), 기타 26%(45억달러) 순

구분/품목	광물상연료	철강아연	진주구금속	기타	목재	구리	알루미늄	니켈	슬래그	비료
수입액 (억달러)	116.6	87.7	54	45	37	28	26	24	23	20
비중(%)	69.4	5.22	3.26	2.69	2.72	1.17	1.58	1.48	1.41	1.24

** 러시아 MFN 지위 박탈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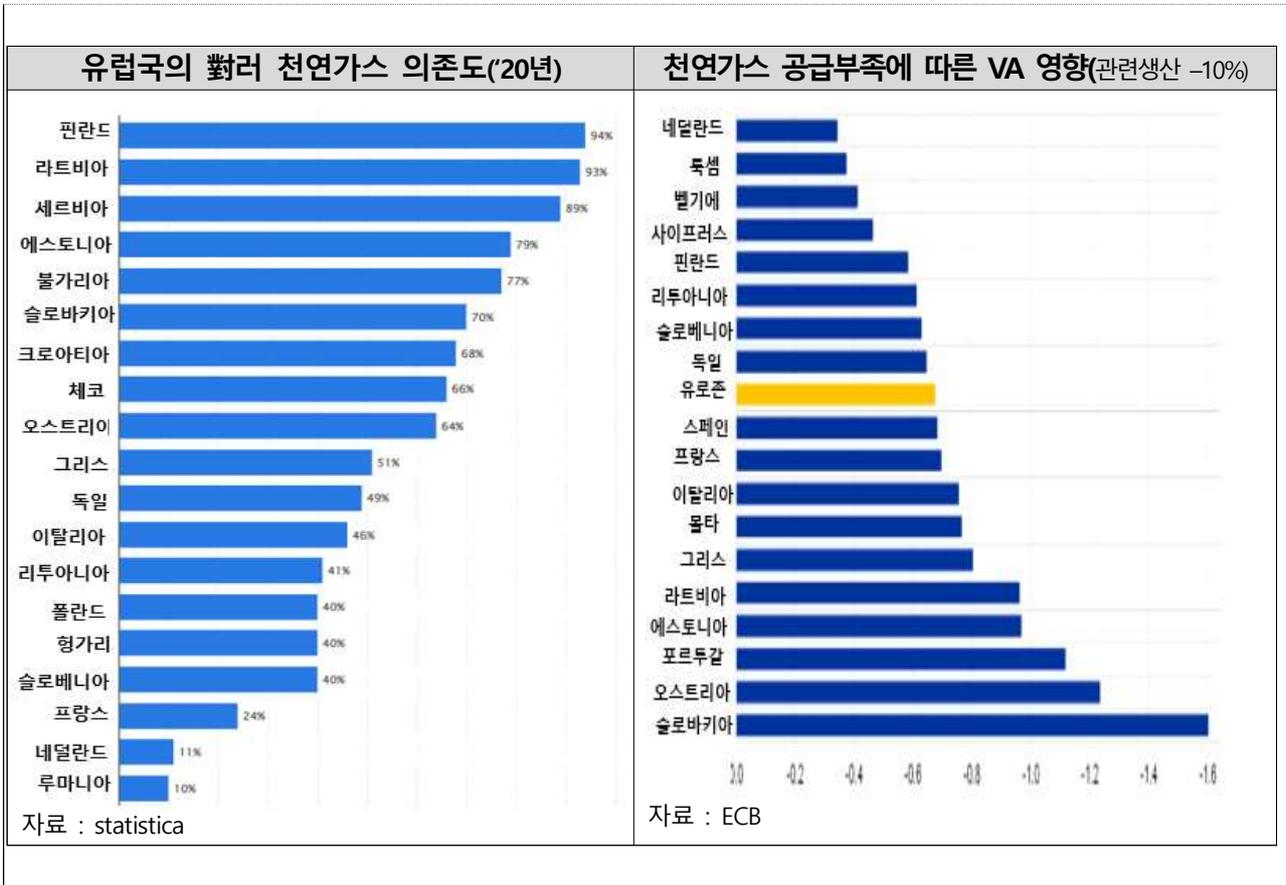
- 철강수입금지 조치로 인하여 역내 철강 부족 및 철강 가격 상승 전망
- * EU 철강 수입재중 러시아 산은 2위(13%)를 차지

[참고] EU 회원국별 對러 에너지 수입중단 관련 입장 및 현황

- (동향) 회원국별 의존도 및 입장 상이해 전면 수입중단 아닌 단계적 감축 수준으로 정상간 합의(3.10~11, EU정상회담)
- 국별 상황에 맞춘 화석연료 의존도 감축, 공급 및 에너지원 다각화 (LNG사용, 바이오가스개발, 수소 등), 공급비상계획수립 등 추진 계획
- 對러 에너지 수입 전면 중단에 대한 회원국별 입장

구분	내용
찬성	(폴란드·슬로바키아) 전면수입 중단에 준비되어있으며 전적으로 동의 (프랑스·스페인) 중단에 찬성하나 러시아와 대화 통해 협력방안 모색하자는 입장
반대	(독일, 헝가리, 불가리아, 핀란드 등)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전면 수입 중단을 반대 * 헝가리, '전면 수입중단에 따른 에너지상승 비용 못내'
유보	(이탈리아, 포르투갈, 체코, 그리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다소 유보적인 입장

- (수입) EU는 난방·전기·산업에 사용되는 에너지 90%를 천연가스로 충당하며, 이 중 약 40%를 러시아에서 수입
- * EU의 對러 에너지 의존도('19년) : 석탄(46.7%), 천연가스(41%), 원유(26.9%)
- (국별의존도) 핀란드(94%), 라트비아(93%)의 의존도가 높고, 프랑스(24%), 네덜란드(11%)는 상대적으로 낮음('20년)
- (영향) 천연가스는 산업·농어업·기계·서비스·가정 등에 폭넓게 이용. 제품생산 초기과정에서 간접소비량이 높아 공급부족 시 영향↑
- 유럽중앙은행(ECB), 천연가스 공급부족에 따라 생산 10% 감소 시, 유로존 내 총 부가가치(VA) 규모 -0.7% 전망('22.1월)
- * 천연가스로부터의 전력·증기·냉방 사용이 큰 회원국의 경우, 손실 규모는 더욱 증가 (슬로바키아 - 1.6%)



2. 유럽의회, 6대 환경분야 및 배터리법 등 채택(3.10)

* 유럽의회, 본회의(3.7~10)에서 주요 입법안 채택

□ (환경) '30년까지 EU의 6대 환경 중점 추진 분야 설정

* 찬성(553표), 반대(130표), 기권(7표)로 통과

- (개요) 그린딜('50년 탄소중립) 구현위해 '30년까지 EU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분야를 설정한 의회 결의안 채택
- (6대분야) △55% 온실가스 감축위한 기후변화 완화, △기후정책 추진, △지속가능 웰빙경제 구현, △독성물질 오염제로, △생물다양성 보존·복원, △생산·소비과정 내 탄소발자국 감축 등
- (보조금 감축) 화석연료 등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 지원의 점진적 폐지위한 법제 마련, 국별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 부여 예정
 - * 집행위는 '23년까지 관련 세부방안 마련할 계획
- (향후 일정) EU 이사회 통과 후, 관보 공포 예정

□ (배터리) 지속가능한 유럽 배터리 규제안 채택 **규정(Regulation)**

* 찬성(584표), 반대(67표), 기권(40표)로 통과

- (개요) 환경위가 수정한 집행위 배터리 규정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
 - * 집행위 상정('20.12월) → 유럽의회 환경위 수정('22.2.10)
- (목적) 전세계 최초로 지속가능 배터리법을 수립, 역내 배터리 표준을 국제 산업표준으로 만들고 글로벌 시장 주도
- (주요내용)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재활용원료 비율 강화, △라벨링, △배터리 수거, △탄소발자국, △공급망 실사 등 지속가능 기준 마련
 - * 대상품목 : 이동식(스마트폰, 전자기등), EV·차량용, LMT(전자제품), 산업용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

분야	내용
실사	· 충전식 산업용 및 EV 배터리의 경우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 · 배터리에 함유되는 원자재의 공급망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부속서 II 적용
라벨링	· 기본적으로 CE 마킹 필수이며 '27.1.1부터 수명주기, 충전용량, 위험물질 포함여부, 수거정보 등 관련 정보 표기된 라벨링 부착 의무
재활용원료	· '30.1.1부터 산업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내 코발트·납·리튬·니켈 물질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 ('30.1.1부) 코발트 12%, 납 85%, 리튬 4%, 니켈 4% → ('35.1.1부) 코발트 20%, 납 85%(변동없음), 리튬 10%, 니켈 12%
탄소발자국	· EV 및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에 대해 탄소발자국 등급이 도입되며, 탄소발자국 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 필요
제품설계	· 이동식 및 전기자동차(LMT) 배터리의 경우,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소비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제품설계(~'24년)
수거	· 이동식 폐배터리 회수율 목표 '25년 70% → '30년 80% 설정
제재조치	· 규정 미준수에 따른 제재는 EU 차원이 아닌 회원국별 시행

- (향후 일정) 상반기 중 EU 이사회 논의 후, 최종 법안 도출 계획

□ (법치주의) 집행위에 헝가리·폴란드 예산지원 중단 촉구

* 찬성(478표), 반대(155표), 기권(29표)로 통과

- 헝가리 및 폴란드 관련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2.16)을 환영하며, 집행위에 예산지원 중단위한 신속한 이행을 촉구
 - ECJ는 조건부 법치 매커니즘*이 EU 법률과 합치되며, 헝가리·폴란드가 EU 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21.3.10)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결

<(참고) 조건부 법치 매커니즘(Rule of Law Conditionality Mechanism) 및 EU-폴형 갈등>

- (조건부 법치 매커니즘) 법치주의 및 EU 예산을 연계하는 규정으로, 법치주의 미준수 회원국에 대해 EU 예산 및 경제회복기금(NGEU)의 지원 중단 가능('21.1.1부로 발효중)
- (갈등) 집행위는 폴란드·헝가리 내 법치, 민주주의 등 EU 공통가치 훼손을 비판하며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동 국가들은 집행위의 자국법안 제재는 국가의 자주권을 제한한다며 대립 중

- 의회는 법치주의 위반국에 대한 느슨한 대응은 EU 통합 및 시민의 신뢰를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공통가치를 훼손한 국가에 EU 세금이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

* 자료원 : 유럽의회

뉴스 단신

□ (물류) 러-우크라^發 글로벌 물류대란, 항공→해운·철도로 확산

- EU↔러간 항공운항전면중단에 따른 물류차질, 해운·철도로 확대조짐
 - 대러시아 항공제재 및 우회 운항에 따른 운송시간·비용증가 전망
 - * (KLM) 러시아 영공 경유 항공노선 운항 중지
(Lufthansa, AirFrance, Finnair, Virgin Atlantic) 아시아向 화물기 운항취소
 - ** (Scandinavian Airlines) 코펜하겐-상하이 노선변경, 코펜하겐-도쿄 노선 일시중단
- (해운) 대러제재로 러시아노선 운항중단·항만적체·요금인상 우려고조
 - 주요 대형선사*, 대러제재 동참 및 물동량 감소로 러시아항 정박 노선 신규예약 중단 및 노선 변경
 - * Maersk, Ocean Network Express, Hapag-Lloyd, MSC 등
 - 유럽항구, 제재준수위한 세관검열강화 및 해운·부두인력* 부족 사태로 항만적체현상 심화될 전망
 - * 전 세계 상선인력 14%차지하는 러·우크라이나의 국가총동원령에 따른 귀국·출국금지
 - 선박연료가격 급등에 이어 공동전쟁위원회(JWC)가 흑해노선을 고위험전쟁지역으로 분류, 보험료인상 등 해상운임 상승압박 가중

- (철도) 중국-유럽 간 국제화물열차 정상운영에도 불구하고, 선적량 급감
 - 러 침공이후, 중국철도청은 우크라 경유열차 선적중단 및 벨라루스·헝가리·폴란드로 노선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나,
 - 대러 제재강화와 운송보험가입 권장 등으로 위험·비용부담을 우려한 수출기업의 선적량 감소추세

* 자료원 : FT(3.11)·Global Times(3.9) 등 언론사 종합

□ [대외관계] 러, 이탈 글로벌기업에 강경조치 및 서방 제재 맞대응

- 러 총리, 이탈 글로벌 기업에 대한 행정대응 예고, 비우호국 출신 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행정조치 입법(3.11)
 - 비우호국 출신 외국인이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대상
 - 외국인 소유주가 부당하게 영업 중단 → 법원은 3개월간 임시관리 임명 → 신규 기업 주식 상장 및 기존 기업 청산 절차
 - 또한, 비우호국 출신 기업과 개인의 지적 재산권 및 특허권 보호 철회*로 특허권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기술사용 가능
- * 러시아 자체공급이 제한되는 특정 물품에 한해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을 철회
- 러시아는 내수 안정 및 서방 제재에 맞대응 위해 수출 금지 품목 발표 및 서방 주요인사에 대한 제재 예고
 - '22년 말까지 수출을 금지하는 200여 가지 품목* 발표(3.11)
 - * 수출 금지 목록에는 기술·통신·의료 장비, 운송 수단, 열차, 터빈, 철강, 가공용 선반, 프로젝터, 농기계, 전자기기 포함. 석탄, 석유, 나프타, 수산물은 제외
 -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등 친러 국가에 대한 수출은 계속되나, 내수 안정을 위해 곡물, 설탕, 비료 수출은 잠정 중단

* 자료원 : Euractiv(3.11), BBC (3.11)

□ [환경] '22년 EU가 수립할 환경 분야 법안 발표 일정

- (개요) 유럽표준화환경단체(ECOS)*, 올해 EU가 중점 추진할 6대 환경 분야를 제시하며 관련 법안별 일정을 발표

* 유럽 표준화 환경단체(Environmental Coalition on Standards)

○ (분야) 제품설계, 표준화, 전자기기(순환경제), 건물, F-가스, 클린에너지 등

분야	내용	발표시기(예정)
제품설계	지속가능한 제품설계의 규범화	집행위, 지속가능제품 이니셔티브* 발표 예정(3.30) * Sustainable Products Initiative
표준화	첨단기술 등 표준화 통한 기술 주권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선도	집행위, 유럽 표준화전략 발표(2.2) * Standardisation Strategy
전자기기	전자기기 품목의 순환경제 구현	집행위, 관련 이니셔티브* 발표 예정(7.5) * new design requirements and consumer rights for electronics
	공통충전기	유럽의회 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공통 충전기 관련 입장 표결 진행 예정(4.20)
	스마트폰&태블릿	집행위, '22년 말까지 관련 에너지 라벨 및 에코디자인 기준* 마련 * new specific energy labelling and ecodesign regulations for smartphones and tablets
건물	설계, 시공, 폐기 등 건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환경영향 고려	집행위, 건축 관련 제품 규정* 발표 예정(3.30) *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불소화가스 (F-가스)	냉장고,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불소화 온실가스(F-가스) 규제	'22.4월 집행위, F-가스 규정안* 발표 예정 * F-gas Regulation
클린에너지	화석연료 사용 제한 방안	'22~'23년 EU 차원의 논의 진행

* 자료원 : 유럽표준화 환경단체(ECOS)(2.21)

규정(Regulation)

□ **[디지털] EU 공동 건강데이터공간 입법 예정, 데이터전략 추진 가속화**

○ EU 공동 데이터 공간* 개발 계획 중 건강 분야 초안이 유출

<EU 공동 데이터 공간(Common European Data Space)>

· (개요) EU 데이터 전략의 3대 추진 입법 중 하나로 집행위는 역내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흐름을 위해 EU 공동 데이터 공간 개발 추진

<EU 데이터 전략 추진 입법>

법안	내용	현황
데이터거버넌스법	공공 데이터 재사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	발효('21.11)
데이터법	비개인 데이터 접근규칙 수립 (데이터접근 주체별 조건 규정)	법안제안('22.2)
공동 데이터공간	10개 핵심분야별 EU 공통 데이터공간 개발	분야별 준비 중

· (목표) 데이터 경제 주도 위해 EU 단일 데이터 시장 조성 및 분야별 공유 활성화
· (분야) 데이터 공간 마련할 10개 핵심 분야 선정 △건강, △농업, △제조, △에너지, △운송, △금융, △공공행정, △기술, △연구 데이터, △그린딜

- 역내 의료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의료 서비스 혁신을 위해 의료 데이터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목표
- 환자의 데이터 접근권 강화, 기업 간 공유를 통해 디지털 건강 서비스 혁신을 유도

- 역내 의료 데이터, 단일 건강 데이터 플랫폼* 통해 데이터 공유 계획
 - * 클라우드, 엣지 기술 이용, 대규모 상호 운용이 가능한 오픈 소스 스마트 미들웨어 플랫폼 개발 예정
- 기존 EU 국가 간 전자 의료 서비스* 각 회원국별 도입 확대 중
 - * 전자 처방전, 알레르기, 약물, 질병, 수술 기록 등의 데이터 공유로 국경을 초월해 환자는 처방약을 구매 할 수 있고, 의사는 환자의 건강기록 조회 가능. 점차 데이터 범위 확대 예정
 - * 자료원 : Euractiv(3.9)

□ (수소) 수소 전환 가속화 위해 청정수소 파트너십 연구자금 신청

- EU-민간 합작 청정수소 파트너십(Clean Hydrogen Partnership), 첫 번째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3억유로* 기금 사용 신청
 - * 청정수소 파트너십 총 기금은 10억 유로 규모. 이번에 신청한 3억 유로 기금에 동일 규모 민간자금 투입 예정으로 총 연구자금 6억 유로 규모 예상
- 총 41개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 주 연구분야는 청·회색 수소를 녹색 수소로 전환하는 것, 수소 저장 및 운송 분야
- 수소 밸리*를 중심으로 연구 활성화할 계획으로, 총 예산 10%를 최소 5개 밸리 설립을 위해 투자 계획
 - * 수소 밸리(Hydrogen Valley)는 생산-운송-유통-저장-사용 까지의 수소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연구 및 산업 클러스터

* 자료원 : Euractiv(3.10)

CBAM 모니터링

□ 현지 동향

- 언론 : SEI(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스웨덴 환경연구소)
- 게재일자 : '22.3.7
- 주요내용
 - 스웨덴 산업계는 EU CBAM 중 역내 수출기업 지원 부재(리베이트), 무상할당제 폐지, 산정방법에서의 간접 배출(전기 등) 제외를 우려하고 있으나,
 - 일부 NGO들은 EU가 수출기업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탄소가격 책정 범위의 제한, △수출 인센티브에 따라 탄소배출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 △리베이트에 따른 WTO 규정 위반 및 역외국 통상 보복조치 가능성을 우려하며 수출기업 지원방안에 마련에 회의적

- 한편, 현 EU 의장국인 프랑스의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중 CBAM 관련 EU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 CBAM 최종안은 가을 초 마련될 것으로 예상. 이 경우, CBAM 전환기간은 스웨덴이 EU 의장국을 맡게되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 링크 :

<https://www.sei.org/featured/qa-swedish-perspectives-on-cbam/>

www.kotra.or.kr

KOTRA EU 주간 브리핑 구독 신청, 자료 문의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 'KOTRA 브뤼셀무역관' 및 채널추가

(이메일) 브뤼셀 무역관 권지연 과장 (jiyeonkwon@kotra.or.kr)

